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867 호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군산시 재향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 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시민안전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산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4. 해양환경 보전,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등 공익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 ① 경우회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868 호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의하여 군산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리자를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군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 시 홈페이지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해촉) 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7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시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별지 제3호서식)
5.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8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 총괄관리부서는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현황목록 및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태점검 및 평가)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 명칭 기재	‘00.00.00	○○○ 시장 ○○○ 부시장 ○○○ 국장 ○○○ 과장 ○○○ 계장 ○○○ 주무과	
○ 내용	‘00.00.00	○○○ 국장 ○○○ 과장 ○○○ 계장 ○○○ 주무관 <관련자> ○○○ 시의원	
○ 내용	‘00.00.00	○○○ 과장 ○○○ 계장 ○○○ 주무관 <관련자> ○○○ 시의원	

<기재항목>

-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
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성 명	
연 락 처	E-mail : 전화번호 :
정책실명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참고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 성 명 : 홍 길 동
- 연 락 처 :
(E-mail 주소) ooooo@mail.com
(전화번호) 010-1234-5678
- 신청 사업명 :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 신청사유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창업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책임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869 호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사항은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p> <p>제5조(이월사용)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p> <p>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p> <p>〈삭 제〉</p> <p>제6조(준용) ----- 사항은 「지방회계법」-----.</p>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870 호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청항(淸巷)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가”를 “깨끗한 어항 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0조의”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어촌·어항법」”을 “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를 “제33조”로 한다.

제35조 중 “제30조”를 “제3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 ①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 ①-----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시장은 관할 국가어항 구역의 청항(淸巷)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관리·운영하는 어항청소선이 항내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어망 등 수거처리가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 ----- 깨끗한 어항 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 ----- ----- -----.
제23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 (생략)	제23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6조(점·사용료의 산정) ①시장이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가목 (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생 략)

제29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점·사용한 자가 시장이 발부한 납입고지

②-----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
-----.

제26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
-----.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시장이「어촌·어항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 (생 략)

제34조(회의록 작성) ①협의회 위원장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회의록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35조(협의결과의 조치) 시장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 법 제43조 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회의록 작성) ①----- 제33조-----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협의결과의 조치) ----- 제33조-----

-----.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871 호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제12조제3호”를 “제11조제3호”로, “14일”을 “6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u>제12조제3호</u> 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u>14일</u>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한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u>제11조제3호</u> -- ----- ----- <u>60일</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872 호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제6조 제1항” 을 “제6조제1호” 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100분의 30” 을 “관람료를 100분의 50을”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인” 을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사용제한 및 승인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 및 승인취소) ----- ----- -----.
1. 제6조 제1항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때	1. 제6조제1호-----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및 관람료 감면)	제10조(사용료 및 관람료 감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다.	② ----- ----- 관람료를 100분의 50을 -----.
1.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1. -----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신설>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③ (생략)</p> <p>제16조(위탁운영) ① (생략)</p> <p>② <u>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u></p> <p>③ (생략)</p> <p>제18조(위탁협약) 시장은 시민예술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u>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u></p> <p>1. ~ 6. (생략)</p>	<p>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p> <p>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위탁협약) ----- ----- ----- -----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p> <p>1. ~ 6. (현행과 같음)</p>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873 호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군산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단체 육성
2.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874 호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군산시(이하 “시” 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
2.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구성에 관해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875 호

군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청결한 생활환경조성과 이에 따른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결”이란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된 흙·먼지 등에 의한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상시설물”이란 전주·가로등·공중전화·신호등·도로(교통) 표지판·배전함·육교·버스(택시)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
3. “도로”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현행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길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 전 지역의 산·하천·도로·공원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지상시설물·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전단·현수막, 농촌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의식전환과 실천분 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① 주민은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지상시설물 관리주체는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벽보·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깨끗한 거리 지정)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생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클린 군산의 날 운영) 시장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클린 군산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별도의 날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봉사대 구성 등) 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읍·면·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봉사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봉사대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청결실천에 관한 사항

2.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계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물품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방활동) 주민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전단·벽보를 불법으로 부착하는 행위 발견 시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생활환경오염 예방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관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876 호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이라한다”를 ““법 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개별계량장치”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
행지침」에서 정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장치
를 말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을 “시장”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규칙”을 “법 규칙”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 장치의 설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를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치”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 를 “보관시설, 수거용기 또는 개별 계량장치” 로, “법 제68조제1항제1호” 를 “법 제68조제3항”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을 “법 규칙” 으로 한다. 제21조제2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기별로 1회” 를 “연 1회로 하되,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로 1회” 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표3” 을 “영 별표 8”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법 규칙” 이라 한다-----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개별계량장치”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장치를 말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u>군산시장</u> (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및 <u>규칙</u>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지역은 분리배출지역에서 제외한다. ② (생략)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u>시장</u> ----- ----- ----- ----- -----. - <u>법 규칙</u>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생략)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치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u>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u> 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 ----- <u>보관시설,</u> <u>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치</u> ----- ----- ----- -----.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u>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u> 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u>법 제68조 제1항제1호</u>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 <u>보관시설, 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치</u> ----- ----- ----- <u>법 제68조제3항</u> ----- -----.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략)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u>시행규칙 제14조</u>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②----- ----- ----- <u>법 규칙</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u>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u>	2. ----- ----- ----- ----- <u>후단 삭제</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u>반기별로 1회</u>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 <u>연 1회로 하</u> <u>되,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반</u> <u>기별로 1회</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u>별표3</u> 과 같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u>영</u> <u>별표 8</u> -----.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u>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u> 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 <u>다른 법률에 특별한</u> <u>규정이 있는 경우를</u> ----- -----.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877 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7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 후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분류하여 배출 <p>※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p>
2. 골판지 외 종이류	- 신 문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3.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기타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4. 병 류	- 음료수병,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농 약 병	- 물로 행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5. 고 철 류	- 고철 (공기구, 못, 철사,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6. 무색 PET병 (생수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병 (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플라스틱류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8. 의류	- 일반의류	- 물이나 기름, 흙 등 이물질이 묻지 않는 의류 - 반드시 개어 끈으로 묶어 배출 - 이불, 솜, 커튼 등은 재활용이 안 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9. 전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구매처에 반환방식으로 배출 - 읍면동 사무소 수거함 및 공동주택 수거함, 동지역 의류수거함에 부착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10. 형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광등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읍면동 사무소 수거함 및 공동주택 수거함에 배출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878 호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추락·약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5. “어린이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 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시장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③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 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879 호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880 호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법시설”이란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문, 방법창, 방법등, 방법용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관계기관”을 “군산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취약계층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방법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법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설치를 지원하는 방법시설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에서 정한 성능과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증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군산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시 군산경찰서 범죄예방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u>“방법시설”이란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문, 방법창, 방법등, 방법용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u>
제5조(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u>관계기관과</u>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③ · ④ (생 략) <u><신 설></u>	제5조(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군산경찰서 등 관계기관</u> -----. ③ · ④ (현행과 같음) <u>제8조의2(취약계층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①</u> 시장은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u>방법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법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u> 설치를 지원하는 방법시설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에서 정한 성능과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증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 경관 조례」에 따른 군산시 경관위원회가 심의·자문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산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

- 다만,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군산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시 군산경찰서 범죄예방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881 호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9조(사용료 반환)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u></p> <p>1. <u>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u></p> <p>2. <u>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u></p>	<p><u>제9조(사용료 반환)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u></p>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882 호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를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3조제1호가목”을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귀농자”란”을 ““귀농자”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를 “군산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귀촌자”란”을 ““귀촌자”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를 “군산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항만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경제항만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구입 자금”을 “임차 자금 및 주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칙”을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군산시 귀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성별통계 생산사업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사업
4.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사업

5. 귀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6. 읍·면과 작목별 귀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지원 사업
7.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지정 취소)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12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농업·농촌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 ----- -----.
제2조(정의)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1호----- ---.
2. “귀농자”란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 한다.	2. “귀농자”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 군산시----- ----- -----.
3. “귀촌자”란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 한다.	3. “귀촌자”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 군산시-----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8.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을 말한다.	8.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위원장은 경제항만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 ----- <u>농업기술센터소장</u>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1. 당연직 위원: <u>경제항만국장</u> , <u>농업기술센터소장</u> , <u>농정과장</u>	1. ----- <u>농업기술센터소장</u> , <u>농촌지원과장</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농지 <u>구입</u> 자금 지원	3. --- <u>임차</u> 자금 및 주거 ----- -----
4. <u>주거</u> 지원	<삭 제>
5. (생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제4장 보칙	제4장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신설>	제9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군산시 귀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 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제1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성별통계 생산사업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사업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9조 ~ 제11조 (생략)</p>	<p>4.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사업</p> <p>5. 귀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p> <p>6. 읍·면과 작목별 귀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지원 사업</p> <p>7.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p> <p>8.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11조(지정 취소)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p> <p>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p> <p>제5장 보칙</p> <p>제12조 ~ 제14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p>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1883 호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하며”를 “하며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인접시군 소재 농지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허용한다”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전액면제”를 “전액 및 일부면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임차인 중 「전자정부법」 제8조 및 제36조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진다”를 “질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제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위반 : 경고
2. 2회 위반 : 6개월 제한
3. 3회 이상 위반 : 12개월 제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임대기준 및 사업운영) ① 임대신청은 군산시 거주 농업인과 타지역 거주농업인이 경작지를 군산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임대사업의 형평성을 위하여 기종별 1농가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이 지역특화사업육성,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농업기계임대 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종별로 임대사용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임대기준 및 사업운영) ① ----- ----- ----- 하며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인접시군 소재 농지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전액면제 : 재해 · 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액 및 일부면제 ----- -----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임차인 중 「전자정부법」 제8조 및 제36조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② (생 략)

③ 임대농업기계를 출고한 후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15조(임대차계약의 제한) (생 략)

<신 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질 수 있다.

제15조(임대차계약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제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위반 : 경고

2. 2회 위반 : 6개월 제한

3. 3회 이상 위반 : 12개월 제한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 748 호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폐지규칙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 749 호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군산시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산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서를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4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서의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5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전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전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안전 심의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들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제9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 750 호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6조,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귀농·귀촌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귀농·귀촌인 지원 자격의 세부사항은 귀농·귀촌 실태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군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지구입자금”을 “농지임차자금 및 주거”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2. 농업 창업 자금 지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가. 지원대상 : 타시군에서 군산시로 전입한 5년 이내 귀농·귀촌인

나. 지원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0조”를 각각 “제13조”로 한다.

제7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귀농·귀촌자의 지원 자격) 조례 제6조 및 제8조 귀농·귀촌자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귀농·귀촌자 세대구성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귀농·귀촌자 지원 신청은 귀농·귀촌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귀농·귀촌자의 지원 자격) --- 제6조, 제7조 ----- 1.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귀농·귀촌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귀농·귀촌인 지원 자격의 세부사항은 귀농·귀촌 실태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군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사업의 지원) ① 조례 제6조 에서 규정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농업 창업 자금 지원 가. 지원대상 :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3조를 준용한다. 나. 지원금액 : 세대당 20,000천원 까지 융자 3. 농지구입자금 지원 가. 지원대상 : 논, 밭, 과수원에 한한다 나. 지원금액 : 세대당 60,000천원 까지 융자 (실거래 가격의 90% 이내)	제4조(사업의 지원) ① ----- 1. (현행과 같음) 2. 농업 창업 자금 지원 :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3. 농지임차자금 및 주거 ----- 가. 지원대상 : 타시군에서 군산시로 전입한 5년 이내 귀농·귀촌인 나. 지원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4. 주거지원</p> <p>가. 지원대상 : 농촌주택에 한하며 주택 신축, 주택구입, 주택수리 중 세대별 1분야 만 지원</p> <p>나. 지원금액 : 신축 40,000천원, 주 택구입 30,000천원, 주택수리 10, 000천원까지 용자</p>	<p><삭 제></p>
<p>5.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⑤ 용자금은 세대당 100,000천원을 초 과 할 수 없다.</p> <p>⑥ 용자금은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 별회계를 재원으로 하고 용자에 대한 사항은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4.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제6조(지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조례 제 10조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하여야할 지 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의결을 거쳐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결정 할 수 있다.</p>	<p>제6조(지원금의 회수) ① ----- 제1 3조 ----- ----- -----.</p> <p>② ----- - 제13조 ----- ----- -----.</p>
<p>제7조(준용)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 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p>	<p>제7조(준용)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p>

군산시 공고 제2021-1433호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부합되도록 조례 정비
- 나. 지역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 및 변경

2. 주요내용

- 가. 소집 및 소집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
- 나. 자율방재단 및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 다. 자율방재단 단장·단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 라.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 가.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및 기타의견과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063-454-3865, FAX: 063-454-382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지역자율방재단 담당자(063-454-38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로, “조직”을 “구성”으로 한다.

제2조 중 “함”을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조직)”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이 위촉한다”를 “한다.)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체 또는 개인 중”을 “제4항의 단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단원은”을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으로, “제출”을 “시장에게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제6항(종전의 제5항) 단서 중 “단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⑨읍·면·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 단원 중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득한자로 선출한다.

제5조의 제목 “(임원 및 임무 등)”을 “(임원의 직무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무”를 “직무”로 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해임)” 을 “(해임 및 해촉)”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단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그 밖의 부정” 을 “부정” 으로, “경우” 를 “경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을 “해임”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한다.” 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장이” 를 “시장이” 로, “등” 을 “등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장 또는 단원” 을 “회장 또는 위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단장” 을 “회장”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소집)” 을 “(소집 등)”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 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단원이**” 를 “**단원은**” 으로,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 를 “**수행한 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를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8월 말**” 을 “**9월 말**” 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7호 중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를 “**비용**”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단장은 제9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해임조치**” 를 “**해임 및 해촉**”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제12조관련)

출 입 증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진 3×4</p> </div>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원

5.5cm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 . . . 군 산 시 장

7.7cm

[별지 제7호 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재해보상청구서

(제10조2관련)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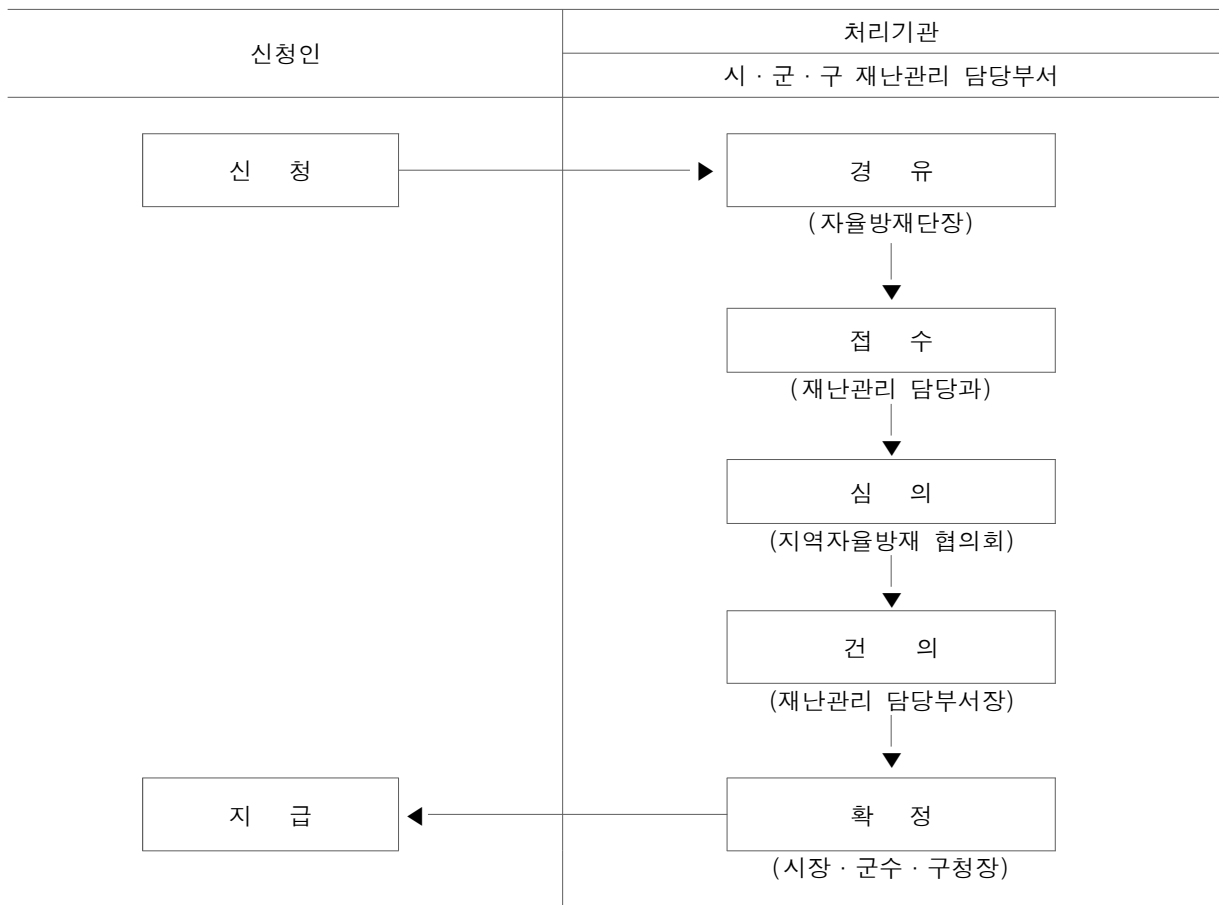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군산시 공고 제2021-1445호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과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일관성 및 일부 내용 수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형평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에 따른 시행규칙 제명의 일관성을 위한 시행규칙 제명 개정
- 공급관 연장 100m당 신청자격 세대수 조정 및 단서삭제 등(안 제3조)
- 예산 사용의 효율성 및 다수 시민의 혜택을 위한 선정방법 수정(안 제4조)
- 「민원처리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개정(안 제6조)
- 기타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새만금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새만금에너지과 우) 54078
- 전 화 : 063-454-2715, FAX : 063-454-815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새만금에너지과 에너지관리계 (☎063-454-2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10세대”를 “35세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공사주민 분담금액이 작은”을 “투자비용 대비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100미터당 10세대”를 “100m당 35세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일”을 “10일”로 한다.

제10조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u>」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반사항과 대상지역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공사주민 분담금</u>”이란 단위사업의 <u>공사분담금</u>으로서 「<u>도시가스 사업법</u>」 및 <u>전라북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u>(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총 공사비 중 <u>사업지역 내 가구의 주민이 분담하도록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u></p> <p>제3조(신청자격) ① (생략)</p> <p>② 신청자격은 단위사업별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u>공급관 연장 100m당 10세대</u> (난방용계량기 설치 기준)미만 지역에 한한다. 단, <u>동시 신청 수요자가 3세대 이상 이어야 한다.</u>(단위사업 공사완료 이후 개별 신청자 제외) <u><단서 신설 2017.01.16.></u></p> <p>③ (생략)</p>	<p><u>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u>」----- ----- ----- -----.</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제3조(신청자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35세대</u>----- ----- <u><단서 삭제></u> ----- ----- <u><후단 삭제></u> -----</p> <p>③ (현행과 같음)</p>

제4조(선정방법)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할 때에는 지역별 수요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조정·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자를 결정한다.

1. 삭 제

2. 지역주민 참여율이 높고 공사주민 분담금액이 작은 지역

3. · 4. (생 략)

제5조(선정통보) ① (생 략)

② 군산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아니 할수 있다.

1. (생 략)

2.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미터당 10세대(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 이상인 지역

3. ~ 6. (생 략)

제6조(이의신청) ① 선정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내용을 결정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선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2. ----- 투자비용 대비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는 -----

3. · 4. (현행과 같음)

제5조(선정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100m당 35세대-----

3. ~ 6. (현행과 같음)

제6조(이의신청) ① -----

----- 60
일 -----
-.

② -----
-- 10일 -----
-----.

제10조(준용규정) -----

----- 도시가스 -----
-----.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 본 시행규칙안은 상위법과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례」 개정 사항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연락처	(063) 454-4400

군산시 고시 제2021-105호

오룡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오룡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명 칭 : 오룡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산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3. 사업시행위치, 규모, 총사업비

가. 위 치 : 군산시 오룡동 897-3번지 일원

나. 사업규모

－ 암석절취 및 토공(2,832m³), 우수관 및 수로관 부설 103본, 콘크리트포장(36m²), 낙석방지책(10경간) 및 낙석방지망(106m²), 관목 및 조경식재 등

다. 총사업비 : 1,000백만원

4. 사업기간 : 2020. 1. ~ 2022. 12.

5. 실시설계도서(설계예산서포함)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비치

6.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7. 사업효과 분석

- 사면유실 및 석축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배수로 및 사면 정비 등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전예방

8.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계획	'22년 이후	비고
사업내용	· 용지보상 · 건축물보상 · 가옥철거 · 사면정비		· 건축물보상 · 용지보상	· 건축물보상 · 용지보상 · 가옥철거 · 사면정비	· 사면정비 · 사업마무리	
총 사업비	1,000		280	720	0	
· 국 비	500		140	360	0	
· 지방비	500		140	360	0	

9.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공사 완료 후 전문가들과 함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여 급경사지의 등급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토록 하고자 함
- 해당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2회(해빙기, 우기)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10.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참고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063-454-38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토지 및 지장물조서 1부.

■ 편입토지·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오룡동	896-7	대	366	366	차옥* 외 1인	군산시 오룡길 34-1(오룡동)				
2	오룡동	896-9	대	132	132	군산시					
3	오룡동	896-8	대	251	251	박순*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진로 85-5(만촌동)				
4	오룡동	897-9	전	299	299	군산시					
5	오룡동	897-11	전	330	330	군산시					
6	오룡동	897-10	전	330	330	군산시					
7	오룡동	897-12	전	331	331	군산시					
8	오룡동	897-13	전	251	251	이두*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13-7, 101동 1605호				
9	오룡동	897-1	전	331	331	이명* 외 1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30길 6-2(파동)				
10	오룡동	897-8	전	411	411	최정*	대구광역시 서구 국제보 상로316, 113동 1403호 (평리동, 평리롯데캐슬)				
11	오룡동	897-6	도	491	203	군산시					
12	오룡동	897-5	전	20	20	김영* 외 2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5-190				
13	오룡동	898-5	전	235	235	김영* 외 2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5-190				
14	오룡동	898-4	전	357	357	김영* 외 2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5-190	주식회사전북 상호신용금고	군산시 죽 성동 44-2	가압류	
								군산시		압류	
								고양시 덕양 구청		압류	
								고양시 일산 동구청		압류	
15	오룡동	927-11	대	54	54	군산시					
16	오룡동	896-65	대	1	1	이진* 외 1인	군산시 오룡동 896-7				
17	오룡동	927-3	대	22	22	군산시					
18	오룡동	896-12	대	23	23	군산시					
19	오룡동	896-11	도	426	426	군산시					
20	오룡동	896-13	대	50	50	군산시					
21	오룡동	896-14	대	7	7	군산시					
22	오룡동	896-10	대	56	56	군산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23	오룡동	896-27	대	40	40	군산시					
24	오룡동	896-29	대	36	36	군산시					
25	오룡동	896-30	대	69	69	군산시					
26	오룡동	896-47	도	3	3	국토교통부					
27	오룡동	896-28	대	56	56	군산시					
28	오룡동	896-5	도	329	12	군산시					
29	오룡동	896-31	대	188	188	군산시					
30	오룡동	896-33	대	10	10	군산시					
31	오룡동	896-4	대	225	225	군산시					
32	오룡동	896-39	전	60	60	군산시					
33	오룡동	896-40	도	3	3	군산시					
34	오룡동	897-4	전	305	305	정창*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 동로 320, 8동 605호 (수송동1가, 신세계타운)				
35	오룡동	896-1	전	165	165	군산시					
36	오룡동	897-3	전	198	198	김영* 외 2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3 가 65-190				
37	오룡동	896-38	도	288	8	군산시					
38	오룡동	897-2	전	195	195	김영* 외 2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3 가 65-190				
39	오룡동	898-6	전	33	33	최원*	옥구군 옥산면 사장 리 1				
40	오룡동	896-57	대	662	34	주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 동 1199-1 두산동아 아파트 102동 106호	군산시수산 업협동조합	나운동지점	근저당권	
								이광*	서울 강동구 고덕동 217 주공아파트 102동 106호	근저당권	
41	오룡동	896-53	도	23	4	군산시					
42	오룡동	896-67	잡	82	10	군산시					
43	오룡동	897-7	도	187	128	군산시					

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1	오룡동	896-7	가옥	스레트	111㎡	차옥*	군산시 오룡길 34-1(오룡동)	
			가옥	스레트	36㎡			
			가옥	스레트	47㎡			
			가옥	스레트	4㎡			
			동백나무	R15	1주			
2	오룡동	896-8	창고	목조	19㎡			
			창고	목조	3㎡			
			창고	목조	2㎡			
			창고	목조	3㎡			
			창고	함석	9㎡			
			뽕나무	R20	20주			
			뽕나무	R15	1주			
			사철나무	R10	19주			
			드릅나무	R5	10주			
			밤나무	R30	6주			
			감나무	R10	1주			
			무화과나무	R30	2주			
			대추나무	R15	1주			
			호두나무	R15	1주			
			복숭아나무	R15	1주			
			복숭아나무	R10	3주			
			보리밥나무	R20	1주			
			소나무	R15	1주			
			은행나무	R15	2주			
			백일홍	R10	3주			
			철쭉	R10	15주			
3	오룡동	896-13	나무1	R25	1주			
			나무2	R15	1주			
			사철나무	R10	1주			
4	오룡동	896-31	나무1	R15	1주			
			사철나무	R10	2주			
			향나무	R10	1주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5	오룡동	897-10	가옥	스레트	24㎡			
			창고	스레트	5㎡			
			창고	스레트	2㎡			
			창고	스레트	6㎡			
			산죽		264㎡			
			나무1	R25	2주			
			소나무	R30	1주			
			과실수	R20	1주			
			뽕나무	R35	1주			
			뽕나무	R30	4주			
			뽕나무	R20	6주			
			나무2	R10	4주			
			사철나무	R15	2주			
			사철나무	R10	3주			
			버드나무	R35	1주			
			감나무	R20	1주			
6	오룡동	896-1	은행나무	R40	1주			
			감나무	R20	2주			
			나무1	R20	2주			
			나무2	R15	1주			
7	오룡동	897-3	사철나무	R10	2주			
			뽕나무	R30	2주			
8	오룡동	897-8	창고	까데기	3㎡			
			창고	까데기	4㎡			
			벚나무	R30	1주			
			뽕나무	R30	1주			
			사철나무	R10	1주			
9	오룡동	897-6	벚나무	R30	40주			
			소나무	R25	2주			
			나무1	R40	1주			
10	오룡동	898-5	과실수	R15	32주			
			과실수	R10	8주			
			사철나무	R10	5주			
			은행나무	R15	11주			
			밤나무	R15	1주			
11	오룡동	896-57	나무	R30	10주			

군산시 고시 제2021-11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7. 14.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협의 2021-00004호 (2021. 06. 11.)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 성명 : 군산시장(항만해양과)
- ③ 허가목적 : 장자도 차도선 선착장 조성공사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산 1-3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2,112㎡
- ⑥ 허가기간 : 2021. 06. 11. ~ 2050. 05. 31.까지

군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15일

군산시 예규 제 41 호

군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지침

군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군산시장의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군산시와 그 소속 구성원(군산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과 군산시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근절의지 및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조치 천명
6. 관련 예산 확보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7.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관련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과 직위에서 피해자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행위자 본인을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 ③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군산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운영한다

-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관련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고충상담원은 실무담당 부서장, 복무담당 부서장, 감사담당 부서장, 외부 전문가(성희롱, 성폭력, 양성평등) 중에서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고충상담원 중에서 또는 별도로 내부 조사관 및 외부 조사관을 각 1명씩 둔다.
-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관련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2차 피해 고충상담·조사접수 대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이버신고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사이버신고창구의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8조제1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9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창구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상담·조사 신청서에 따라 고충상담창구에 신청할 수 있다.

② 피해 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시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보고,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고충 상담 및 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상담·조사 일지를 바탕으로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내부 조사관 : 행위자·피해자 모두 군산시 소속 구성원인 경우
2. 외부 조사관 : 행위자 또는 피해자 중에 한쪽이라도 군산시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가 포함된 경우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성희롱·성폭력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 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처리담당자 및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⑥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제3조3호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 및 조사관 등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고충과 관계된 내용을 직무상 알게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고충심의위원회(이하“고충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 부서에서 추천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외부 전문가 2명을 필수로 구성한다.

1.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 인사·복무담당 부서장 또는 그 부서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감사업무 부서장 또는 그 부서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4. 실무담당 부서장 또는 그 부서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⑦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처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할 수 있고, 위원도 이해 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전의 심사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1.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4.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안전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등) ① 시장은 조사 결과 및 심의 결과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3조제3호 다목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7조(조사 등 결과 통지 및 공개) ①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상담·조사 일지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조사결과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건 처리결과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결과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행위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 시재발 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내용 포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의 재발 방지대책에는 사건 발생 기관·부서에 대한 특별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을 필수로 수립하고 조사 완료 이후 20일 이내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조치를 위한 전보,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인사관리,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체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의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제19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상담·조사 접수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명 (성별)	소속부서				상담원	과장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고충 상담·조사 일지				
고충상담원 (담당자)	상담방법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성명 (성별)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 담 · 조 사 신 청 요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 조 사 내 용				
처 리 결 과	상담 접수	종결 일자		
		종결 사유		
	고충 사건 접수	조치 결과		
		회신 일자		
작성 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